

정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중장기적 체질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모태펀드 1조원 조성 중소기업 지원을 체계화하고 벤처캐피탈을 육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1조원이 조성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자금(중산기금)'에서 4년간 투자회수한 6000억원과 추가출자 4000억원으로 1조원의 투자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간 진입요건을 차별화하고 코스닥 시장 퇴출요건의 단계적 강화 등을 통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창업투자회사가 일정기간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및 M&A 등을 위해 일시적 경영지배를 허용키로 했다.

▲중소기업 전용 CB 설립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부를 분리해 전문적인 신용정보회사(기업CB)가 설립된다. 정부는 'CB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업CB는 신보와 기보 전국 지점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술평가단 독립 올해 하반기에 기보의 기술평가업무가 기술평가단으로 독립된다. 정부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나 영업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기술평가 결과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술평가 모형을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창업절차 간소화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창업절차를 간소화한다. 일괄 의제처리 인허가 사항을 48개에서 65개로 확대하고, 민원처리협의회·사전심사청구제·일괄협의제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기보를 기술창업기업 전문 신용보증기관으로 특화해 자금조달능력이 낮은 창업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네트워크 론(Network Loan)'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 새 기술·기업 등급 평가모형 도입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지난 9일 기업은행장 등 6개 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혁신선도형 중기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 ▲원자재 구매자금 특례보증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확대 ▲특별재해지역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기술금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술평가등급 정의를 기준서 형태로 공표토록 하는 등 기술평가인증이 국내 기술 및 창업 금융의 허브시스템이 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기술평가인증기업에 대한 별도의 신용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기술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액 산정 등 보증심사체계를 기술력 위주로 개편키로 했다. 미래성장산업(GT),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협약기간이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1조원 규모인 예정 보증공급액이 소진될 때까지 연장해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소기업인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별 실정에 맞는 보증확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협회와의 협약보증 등 신규보증상품 개발, 지역향토산업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전자보증 활성화 및 재보증제도 개선 등의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